

제2017-1호 (통권 18권)

NEWSLETTER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소식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아시아 사회과학협의회 회의[AASSREC] 참가기	05
제22차 AASSREC회의 참가기	
임현진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제18대 회장,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공동 특별심포지움	07
한국사회의 내일을 묻는다: 신뢰와 행복의 관계	
김재휘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한국심리학회 회장)	
연구보고서	09
SBS 국가미래의제연구 결산: 인구 오너스 시대의 가족, 경제, 세대	
한 준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연구위원장,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SSK-Networking 공동연구원)	
남기고 싶은 이야기	10
희미해져가는 기억	
임종철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책토론회	11
“대장 두 명이면 분열”에 이원집정부 지지 1명, 대통령제로	
“중국도 대북제재 동참 압박” 설득에 대화파 1명, 제재로	
학회동정	17
협의회 행사	19
협의회 임원진 소개	20

제22차 AASSREC회의 참가기



임 현 진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제18대 회장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에 대한 소개

격년마다 열리는 AASSREC 제22차 회의가 중국 북경에서 있었다. 북경시 외곽에 있는 유서 깊은 시양산(香山)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주관아래 2017년 4월 20일~21일 이틀에 걸쳐 개최되었다.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 차이팡(蔡昉)교수가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1997년 중국에서 AASSREC회

의가 열린 뒤 20년 만에 다시 이곳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사회과학자들이 만나 지역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사회과학원(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CASS)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곳이다. CASS는 연구와 교육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하지만 22개 성에도 독자적으로 설립되어 있어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정책을 연계하여 자문하고 있다. 연구원 산하에 76개의 연구소를 거느리고 있고, 박사급 교수와 연구원이 무려 3,200명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전통을 지닌 국가들에서는 사회과학원이 사회과학협의회 기능을 맡고 있다. 이번 22차 회의에서는 현재 독일, 일본을 넘어 세계경제에서 두 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옛 정치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위상을 되찾으려는 중국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회의에는 이진규회장의 일정상 필자가 한국을 대표하였고, 중국 인민대학 석좌교수로 있는 김익기교수가 발표를 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북경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인, 은행가들도 만나 사업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조선족 출신 학자들과도 한반도 문제에 관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국제관계적 현실이 구(舊)한말에 버금가는 도전과 위기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가끔이나 미국의 사드포대 배치를 둘러싸고 우리의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일련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처지에서 앞으로 한국과 주변 강국들인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서로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제22차 AASSREC회의 개요

제22차 AASSREC회의의 주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환경과 평등한 미래를 위하여”(Sustaining a Green and Equitable Future in Asia-Pacific)였다. 이러한 대주제 아래 첫째, 인구와 환경 지속가능성(Population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둘째, 녹색 경제와 고용(Green Economy and Employment), 셋째, 경제와 사회 불평등(Economic Social Inequality), 그리고 넷째,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라는 네 가지 소주제 아래 모두 1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녹색 일자리(green jobs), 회복탄력적인 대학(resilient university) 등이 주요한 키워드였다.

AASSREC의 주축을 이루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실망스러웠지만 기초강연부터 네 분과에 이르기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늘어나는 불평등과 중산층의 감소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회의를 통해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시장에 관한 새로운 제도적 설계를 해야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특히 오늘의 세대가 이득이 적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세대 간 지속가능성(intergenerational sustainability)에 관해 논의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일종의 선택의 딜레마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금 세대에는 성장을 느끼게 가져가는 것이 다음 세대에 보다 나은 환경과 평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가졌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과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에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복지학, 인류학, 지리학이 일종의 연장상자로서 기능이 있다고 중론을 모았다.



SSK(한국사회과학연구) 사업목적

- 한국사회에 적절한 연구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우수 연구 집단 육성을 통하여 사회과학 연구의 공공성 증진 및 학문적 자생력 강화
- 국가·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연구지원으로 사회과학 연구의 적실성 제고
- 국내외 사회과학분야 연구 동향정보 제공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공동 특별심포지움

「한국사회의 내일을 묻는다: 신뢰와 행복의 관계」



필자는 UN이 1980년대 중반 이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제시하고 2000년에 들어 MDGs 그리고 2016년부터 SDGs를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점에서 강대국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UN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G8을 넘는 G20 국가들의 공동연대와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에 관한 발표가 많았다. 예전과 달리 중국에 관한 통계와 자료가 공개되면서 작금 마주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분석이 매우 흥미로웠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와중에서 어느 나라고 거의 모두 겪고 있는 현상으로 중산층의 감소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유동인구가 2억 5천만 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이 도시로 이입시 호구제의 제약으로 사회보장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중국이 녹색경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비숙련이고 봉급도 낮고 기본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일자리를 늘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거의 40%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줄여야 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녹색경제의 표리를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의 과제

한국 사회과학 분야에서 종합적인 연구협의를 지향하는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우리 사회의 공정하고 균형된 발전을 위해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아왔다. 강단에서 지식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전문적’(professional) 역할에 부가하여 사회를 위해 현실을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공공적’(public) 역할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듯 탄핵 정국 이후 새 정부의 출범이 변화와 개혁의 계기가 되고 여러 분야의 사회과학도들이 다양한 세계관 아래 문제제기를 통해 법치, 원칙, 절차가 지켜지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논쟁과 격론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3년 필리핀에서 제20차 AASSREC회의가 열렸을 때 정용덕 회장을 대신하여 필자가 참석한 적이 있었다. 이 때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한 대만 중앙학연구원(Academia Sinica) 대표단이 2015년 회의를 자신들이 주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간청을 받아들여 당시 한국이 AASSREC회장을 맡았으면 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과감히 양보를 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회장을 맡고 있는 처지에서 다음 번 AASSREC회장은 한국에서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제10대 안병영회장께서 1999년 AASSREC회장을 맡은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다. 이제 아시아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해 한국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8년 차기 회장단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려 한다.



김재휘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한국심리학회 회장

지난 2월 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관 그랜드볼룸에서 「한국사회의 내일을 묻는다: 신뢰와 행복의 관계」라는 주제로 특별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한국심리학회(회장 김재휘)가 기획하고, 한국사회과학협의회(회장 이진규)가 공동 주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매년 사회과학분야의 주요 학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기획 혹은 개최함으로써 사회과학분야의 발전에 기여를 해오고 있는데, 한국심리학회와 공동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특별심포지움의 ‘한국사회의 내일을 묻는다: 신뢰와 행복의 관계’라는 주제는 지금까지는 주로 사회학의 영역에서 많이 다루어 왔지만, 주제의 특성상 사회과학의 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심리학이 중심이 되어 이 주제를 학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 본 것이다. 인지과학자, 임상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 발달심리학자, 상담심리학자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학 분야의 연사들이 자신의 연구나 견해를 발표함과 동시에, 추가로 토크 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도 시도해 보았다. 즉, 사회학자와 심리학자가 사회자의 중재로 서로 대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여기에 주제에 관한 청중들이 견해를 소개하기도 하고, 청중이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곧바로 연사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참석한 약 350명의 청중들은 심포지움의 2부와 3부 사이의 휴식시간에, ‘신뢰와 행복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메모하여 사회자에게 넘겨주었으며, 사회자는 토크 콘서트 진행 중에 청중들의 흥미로운 견해를 소개하기도 하였고, 그러한 견해를 제시한 청중의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토크콘서트의 시도는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청중들의 예상 밖의 견해나 질문들, 그리고 토크에 참여한 연사들의

진지한 답변의 모습 등은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번 특별심포지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난히 혼란스러웠던 국내의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를 경험하면서, 심리학자들이 한국사회의 무너진 신뢰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논의의 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신뢰는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지, 혹은 낮은 신뢰사회가 가져오는 현상은 어떤 것들인지를 제시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 신뢰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1부의 발표에서 김학진교수(고려대, 인지심리학자)는 사람들의 사회적 의사결정을 이끄는 다양한 가치(value)들이 뇌 속에서 어떻게 계산되고 활용되는가를 뇌과학적 자료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도덕성과 이타성과 같은 사회적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구체적으로 윤리소비 과제를 수행하는 실험사례를 통해서, 사람들의 선택행동의 원리를 보여주었는데, 뇌인지과학에 따르면 인간들은 체내 항상성의 불균형을 피하기 위해서 이를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한 많은 복잡한 도구적인 욕구들을 만들어 내며, 이러한 도구적인 욕구들이 또 다시 새로운 가치를 형성한다고 한다. 예컨대, 도덕적 행동은 체내 항상성의 불균형을 피하기 위한 동기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자신의 평판이 하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평판과 인정을 추구하는 도덕적 행동은 사회적 성장을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2부의 발표에서 조선미교수(아주대병원, 임상심리학자)는 무너진 신뢰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서 용서구하기와 용서하기라는 주제를 다루었으며, 이를 트라우마 치유의 과정에 비유하여 그 과정을 설명하였다. 트라우마는 원래 온전하게 사라지거나 망각되기 보다는 잠재화되어 있으며, 특정 계기를 통해서 강화되기도 하고 전이되는 속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치유를 위해서는 트라우마를 발생하게 만든 구조적 배경과 전이 과정을 분석해야 하며, 또한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문화를 구축하도록 하는 사회적 과정을 밝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세월호 침몰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신뢰가 크게 무너진 경우나 사회적 트라우마가 발생한 경

우에는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유(문제규명)에서 시작하여, 기억과 집단 의례(명예회복, 보상, 처벌)를 거쳐, 사회관계 회복이나 개선(사회관계망 개선, 사회시스템 개선)에 도달해야 하는 절차적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부에서 기획한 토크 콘서트에서는, 사회자와 청중의 질문에 대하여, 최인철교수(서울대, 사회심리학자)와 장덕진교수(서울대, 사회학자)가 번갈아 가며 답변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고 추구되는지 심리학의 관점과 사회학의 관점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 심리학에서는 행복의 정의는 Well-Being이며, 이것은 Good mental state(심리상태가 좋은 것)이며, '자신이 평가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감정(affective reaction)'의 합으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반면,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즉 진보적인 사회(social progress)를 만드는 사회구조적인 조건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서, GDP(국내총생산)나 혹은 Better Life Index(나아진 삶의 지수) 등이 행복지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불신이 없는 사회가 행복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국가의 정보투명성 지표도 행복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청중들이 같이 참여한 토크에서는, '신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행복에 도달하는가' 그리고 '신뢰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관한 청중의 질문에 대해서, 최 교수는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으면 소통할 수 있고 관계적 욕구도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가 행복에 이어진다고 하였으며, 장 교수는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여전히 낮은 이유가 성장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가치관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물질주의적 욕망보다 자기표현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신뢰와 행복이 도덕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각자가 서로에게 기대되는 도덕성을 지킬 때, 사회의 도덕성 수준이 높아지며, 이것이 사회에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게 한다고 하였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도덕성을 지킬 때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심포지움은 막을 내렸다.



SBS 국가미래의제연구 결산 : 인구 오너스 시대의 가족, 경제, 세대 *



한 준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연구위원장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SSK-Networking 공동연구원

2016년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SBS의 미래한국리포트 연구를 통해 인구변화가 한국 사회에 가져온 그리고 가져올 변화와 대응을 분석하였다.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압축적 성장과 발전을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적으로도 압축적 변화를 경험했다. 반세기 안에 인구 보너스와 인구 오너스를 연달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인구 보너스란 출산율이 올라가면서 어리고 젊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서 노동력 공급이 원활해

아진 1980년대에도 가족계획과 산아제한 정책을 펼 정도로 인구증가를 막고자 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초저출산 때문에 인구감소를 걱정해야 할 날이 멀지 않았고, 초저출산을 반등시킬 뻔족한 해결책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왜 한국은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가? 학자들은 저출산 상황인 나라들에 비해 초저출산 나라들은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기가 특히 어렵다고 해서 이를 저출산의 덫(low fertility trap)이라고 부른다. 저출산의 덫에는 출산 가능 여성이 줄어 출산의 수가 늘기 어려운 인구적 요인과 함께 인구 오너스의 부담에 따른 저성장과 경제적 침체 때문에 출산을 늦추거나 못하는 경제적 요인, 그리고 형제 없이 자라 자녀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요인이 모두 작용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낙관적 가정 하에 만들어지고 집행되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저출산의 덫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인구 보너스 시기에 만들어진 일-가족-교육의 삼각형 관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아버지는 일터에서 어머니는 집에서 자녀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일터의 장기고용 관행과 남녀간 가부장적 관계,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투자가 맞물려 한국 사람들의 삶을 규정해 왔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장기고용은 유지되기 어려워 노후가 불안하고 가부장적 관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교육열은 경제적 부담은 물론 자녀들과 부모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일자리로 연결도 안되기 때문이다. 이제 저출산 대책은 악순환에 빠진 일-가족-교육 관계를 선순환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가족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 가부장제를 벗어나 일상의 미시적 공공성이 갖춰진 가족, 그리고 흥미와 적성 위주로 행복한 교육이 되어야 저출산의 덫에서 한국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는 시기이며 이들이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부양해야 할 인구의 비율은 낮아지는 현상이다. 인구 보너스는 마치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경제성장이 순조로운 조건을 가져온다. 반대로 인구 오너스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고령화된 인구 때문에 노동력 공급은 줄어들고 그에 비해 부양을 받아야 할 인구의 비율은 높아지는 현상이다. 인구 오너스의 시기는 마치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것처럼 부담이 커져서 경제발전과 성장을 둔화시킨다.

대부분의 사회들이 인구 보너스를 경험했고 인구 오너스도 경험했지만 한국은 어느 사회보다도 보너스에서 오너스로의 전환 기간이 짧았다. 한국에서 인구 보너스를 대변하는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이다.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할 시기는 인구 보너스가 절정이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최근부터 인구 오너스가 시작되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 세대는 부모보다도 더 높은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에 걸맞거나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쉽게 찾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한국은 유독 출산율이 낮은 동아시아에서도 대만에 이어 가장 출산율이 낮은 초저출산 국가이다. 한국은 출산율이 상당한 수준까지 낮

* 본 협의회는 2016년 SBS의 국가미래의제연구를 수주하였고, 한준(연세대 사회학), 김진일(고려대 경제학), 진미정(서울대 가족학) 교수가 수행하였습니다.

희미해져가는 기억 *



임종철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회장 재직 때 일을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회상을 해보니 떠오르는 기억이 없다. 한 일이 없었기에, 혹 있었더라도 다른 분이 다 해주셨기에 기억이 없는 것이다. 대신 떠오르는 것은 협의회 창설 당시의 어두컴컴한 유네스코 빌딩 회의실과 임문영 선생(계명대 명예교수) 모습이다. 협의회 창설 산실인 당시의 명동 유네스코 빌딩은 자연채광도 나빴고 인공조명도 밝지 않았던 것 같다. 임문영 선생 기억은 오랫동안 협의회 일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동시에 떠오르는 것은 고병익, 이만갑, 전해중, 이해영, 한병호, 김성태 교수등 창설을 기획하신 교수분들 모습이다. (이 기억조차 분명하지는 장담할 수 없다. 기록과 다르다면 물론 기록 쪽이 옳다)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되셨지만 당시의 장년의 교수였고 나와 한상복 교수가 가장 연소한 축이었다. 사회과학연구협의회를 창설하려는데 참여하자고 권하신 분은 이해영 교수였던 것 같다. 그래서 같이 나간 곳이 명동소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이었다.

처음에 문제된 것은 역사학과 법학도 사회과학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법학에는 이론이 없었지만 역사학에 대해서는 '글썸'하는 의견도 몇 있었다. 그런데 사회과학연구협의회를 창설하는 기본취지는 학제간 연구를 본격화하려는 것인데 역사학을 배제할 수 있느냐며 예로 들은 것이 경제사였다. 프랑스, 독일 등 먼저 SSRC가 창설된 나라 자료가 있었으면 그에 따랐을 것이지만 당시의 창설 멤버 또 창설을 지원한 유네스코한국위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어쨌든 역사학도 사회과학범주에 넣기로 했다.

다음으로 문제된 것이 대표학회 하나만 회원학회로 하느냐 아니면 모든 분과학회에도 문호를 개방하느냐 하는 일이었다. 역사학 분야는 당시 분명히 국사학회, 동양사학회, 서양사학회가 있었고 경제학 분야도 한국경제학회와 경제사학회가 있었다. 약간의 논

란은 있었지만 모든 분과학회에도 참가를 권유하기로 하였다. 설립 취지를 말하고 가입을 요청하는 공문이 설립추진위원회 명의로 발송되었고 매우 짧은 기간 안에 모든 학회가 참가신청서를 보내와서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는 순탄하게 발족할 수 있었다.

준비 위원회 첫모임부터 시작하여 창립총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은 유네스코한국위에서 부담한 것 같다. 필요한 전화, 문서 연락도 그곳에서 대신하여 주셨다. 임문영 선생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한다. 또 박봉식 박사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때 일천만원을 유네스코한국위 예산에서 협의회 기금으로 회사해 주셨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이었다.

1979년에는 뜻하지 않게 파리에서 열린 사회과학연구협의회 연차총회에 가게 되었다. 한배호 교수가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사실여부는 알 수 없다. 김경동 교수와 같이 갔는데 김 교수는 부지런히 거의 모든 세션에 참가하였고 나는 몇몇 세션에 얼굴만 내비치고 파리 구경만 하고 왔다.

속리산에서 학술발표회를 가졌을 때 사회를 내가 보았다. 좌장 노릇한 것 보면 내가 회장때(1992-94)가 아니었던가 싶다. 나는 개회인사도 없이 '이제부터 발표가 시작됩니다. 발표가 끝나면 자유롭게 토론에 참가해 주십시오. 그럼 발표해 주십시오'했다. 발표가 끝나자 누군가 먼저 논평을 하고 이어 논평자와 가끔 발표자 사이에 말이 오가면서 참가자 전원의 의견개진이 끝나자 시간이 다 되었다. 나는 '그럼 이것으로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하고 끝냈다. 나는 개회사와 폐회사만하고 발표회에는 무임승차한 셈이다. 지금 생각해도 신통하다. 회의참가자는 12명이었던 것 같다. 아마도 60년대 중반 강원용목사가 시작한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발제. 토론식 학술회의 문화가 그 후 빈번해진 학술발표회의 수준을 높이는 밑거름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그 후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듯 에스콰이어재단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사직동 시대가 열리고 협의회도 버젓한 사무실을 갖게 되었다. 정운찬 교수 공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몇몇 학회는 학회사무실까지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총회에 가끔 나갔을 뿐 발이 멀어졌고 정년퇴직 후에는 가본 적이 별로 없다. 20년 격조했던 것이다. 그 죄값으로 이 줄문을 쓴다.

* 지난 호부터 협의회 초창기에 참여한 원로 회원들의 원고를 받아서 뉴스레터에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원고들은 장차 본 협의회 역사의 단행본으로 간행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대장 두 명이면 분열”에 이원집정부 지지 1명, 대통령제로

본 협의회는 금년 2월부터 안민정책포럼,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국가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10명의 사회과학분야의 교수들이 '판정단'으로 참여하는 토론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고, 이 내용은 중앙일보 지면에 '2017 이슈배틀'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최근 기사 두 건을 여기에 전재합니다. 이 토론회는 사회과학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 집단을 육성해서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SSK(한국사회과학연구) 연구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SSK-네트워킹지원사업단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리셋 코리아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중앙일보**

2017 이슈 배틀
1 정부형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한국인은 흔히 '다름'과 '틀림'을 혼용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논리가 판치는 까닭이다. 이를 뛰어넘지 않고선 사면초가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중앙일보는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코리아'의 하나로 '2017 이슈 배틀'시리즈를 시작한다. 가장 첨예한 이슈를 골라 '틀림'이 아닌 '다름'의 토론 현장을 배틀 형식으로 생중계한다.

이슈 배틀 10인의 선정단
* 사회자는 투표 불참

박명호(사회자) 동국대 정치학	김세건 강원대 인류학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	박인휘 이화여대 외교학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박찬수 고려대 경영학	안영진 전남대 지리학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	한준 연세대 사회학
---------------------	----------------	----------------	----------------	-----------------	-----------------------	----------------	----------------	----------------	---------------



대통령 파면된 날 토론했는데 대통령제 유지 9명 중 6명 찬성

1 Round ◆ 사전투표 = '2017 이슈배틀' 첫 토론이 열린 3월 10일 오후 2시. 약 3시간 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유례없는 정치 이벤트에 선정단도 조금은 상기된 표정. '전원 일치는 의외' '법치주의 재확인한 명석한 판결'이란 말이 오갔다. 이날 주제인 '한국의 정부 형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놓고 선정단은 사전투표에서 6명이 대통령제 유지, 2명은 내각제, 1명은 이원집정부제를 택했다. 대통령제 유지 의견이 절반을 넘자 선정단도 놀라는 모습이었다.

“정치 바꾸려면 개헌 필요”에 대통령제 지지 2명, 생각 바뀌

2 Round ◆ 전문가 의견 청취 = 내각제를 지지하는 이규영 서강대 교수가 포문을 열었다. 그는 “한국은 대통령제의 폐해를 잘알면서도 ‘권력 집중’이란 강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 입법·사법·행정 간 수평적 권력 분립만 이야기하는데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 권력 분립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현행 정부 형태와 국회 구성 방식은 이런 수직적 권력 분립을 담아내지 못한다. 다가올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내각제가 한국에 가장 적합하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이원집정부제’ 찬성론자인 이종찬 국민대 교수는 “대통령제는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고 말했다. “여소야대일 때는 합의가 안 돼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여대야소여도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이다. 협치 없이 청와대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국회와 행정부의 대립 속에 표류한다. 이 교착상태를 막을 방법은 아예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뿐이다.” 그러자 대통령제 지지자 박용수 연세대 교수가 “대통령의 실패를 제도의 실패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대통령에게 일관되게 적용됐다. 그럼에도 어떤 이는 권한을 남용한 대통령으로, 어떤 이는 무기력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지 않았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원인은 헌법이 부여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이지 제도 탓이 아니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선 ‘외교적 갈등, 4차 산업혁명, 양극화 등 한국이 직면한 난제는 한 사람의 개인기로 풀 수 없다’ ‘타협 없는 정치문화와 관행을 바꿀 수 없다면 헌법 개정이란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충격요법)가 필요한 시점’ 등의 발언이 나왔다.

세 명의 전문가가 자리를 떴다. 두 번째 투표에선 두 명의 판정단이 생각을 바꿨다. 대통령제를 지지했던 판정단⑥는 이원집정부제로, 판정단⑥은 내각제 지지로 돌아섰다. 판정단⑥는 “김영란법처럼 일종의 충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정단⑥은 “수평적 사회를 지향하는 시대 변화를 감안할 때 새로운 시도(내각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년 대통령, 누가 해도 끝날 땐 조롱대상 돼” “한국 정당 수준 보면 내각제 가능하겠나”

3R 집중토론 후 5:3:1

판정단⑥ 생각을 바꾼 결정적 한마디
“한국은 승자 독식 원리가 철저히 작용하는 나라. 이원집정부제는 두 명의 대장이 공생하는 형태인데 한국 정치문화가 그걸 감당하겠나?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을 만들 뿐”

3 Round ◆ 집중 토론 = 토론 초반엔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이 많았다.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가졌지만 5년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난다. 그러니 누가 대통령을 해도 임기가 끝날 때쯤엔 조롱의 대상이 된다. 관찮은 리더도 망가질 수 있는 이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판정단⑨>

“제왕적 권력은 오해다. 미국처럼 행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는 것(한국 대통령은 긴급 재정경제명령권만 가짐)도 아니고, 거부권 행사가 활발한 것도 아니다.”<판정단①>

“엄청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이나 국무원 같은 권력기관을 사유화하는 데도 제왕적이지 않다는 얘긴가?”<판정단⑧>

“인치(人治)와 권력기관 사유화가 어떻게 헌법의 문제인가? 헌법 정신을 따르지 않고, 편법과 탈법을 하기 때문 아닌가? 그걸 막을 실질적인 대책을 찾는 게 맞다. 이번 탄핵을 계기로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전 국민이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판정단③> 현행 유지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판정단⑦의 발언이 분위기를 확 바꿨다.

“대통령이 부처 실·국장 인사까지 개입한다. 이런 문화가 왜 자리를 잡았는지 생각해 보라. 선거 전부터 유력 후보에게 물러가고, 국회의원으로 출서기 하고, 당선 후엔 캠프 출신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간다.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된 그 자체가 문제다. 헌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차가 급발진을 했으면 원인을 정확히 몰라도 차를 바꾸는 게 맞지 않나?” 그러자 대통령제를 지지한 판정단④가 맞받았다. “한국 정당의 수준을 생각해 보라. 보수는 지도자 중심의 위계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보는 파편화됐다. 서로 싸우면서 당을 쪼갬다가 코너에 몰리면 다시 붙이는 일을 반복한다. 내놓은 정책에도 정체성이라고 찾아보기 어렵다. 내각제를 하면 정당간 카르텔이 생멸을 반복하면서 불안정성만 높아진다.” 대통령제와 내각제 지지자 간 설전은 더 뜨거워졌다.

“내각제는 협치가 불가피한 정부 형태다. 또 정당 정치를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전문가도 길러낼 수 있다. 훨씬 장기적이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판정단⑩>

“이미 헌법엔 내각제 요소가 있다. 총리가부처 업무를 총괄하고, 국회의원의 입각도 허용한다. 대통령제로도 연정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다. DJP연합도 있지 않았나.”<판정단②>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접점을 벌이는 사이판정단⑩가 치고 나왔다. “그러니 인위적으로라도 권한을 나누자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에선 여소야대가 없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아닌가? 이것만 근원적으로 차단해도 책임 정치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원집정부제는 ‘이도 저도 아닌

대안’이란 비판에 막혔다. “분권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엔 안 어울린다. 외교와 국방은 대통령이 한다는데 예를 들어 사드 배치 같은 문제는 누가 결정하고 책임지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당이면 몰라도 아니라면 엄청난 갈등이 불가피하다.”<판정단②>

2시간에 걸친 토론이 끝나고 최종 투표가 시작됐다. 대통령제에서 이원집정부제로 옮겨갔던 판정단⑤는 다시 입장을 바꿔 대통령제로 돌아갔다. 나머지는 이전 선택과 같았다. 판정단⑥의 생각을

바꾼 건 판정단②의 이 한마디였다.

“쪼갤 수 없는 게 권력의 속성 아닌가? 한국은 승자 독식 원리가 철저히 작용하는 나라다. 이원집정부제는 두 명의 대장이 공생하는 형태인데 한국 정치문화가 그걸 감당하겠나?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일 뿐이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첨예한 이슈 놓고 ‘삼세판 토론’... 타협점 찾기

이슈 배틀’ 어떻게 진행하나

생각 밝힌 뒤 전문가 설명 듣고 토론. 주제 잘 아는 1명 사회, 9명만 투표

전문가 주장별 쟁점

대통령제 유지 | 박용수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 현행 대통령제엔 이미 내각제 성격 포함
- ‘제왕적’인 이유는 검찰 등 권력기관의 편법적 통제에서 기인
- 내각제 하기에 한국 정당 수준 떨어져

의원내각제 |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미국 이외, 선진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 내각제 채택
- 정권이나 지도자 바뀌어도 정책 지속성 확보
- 통일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역 민의 담아낼 수 있는 내각제가 적합

이원집정부제 | 이종찬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현재는 분점정부(여소야대)로 인한 교착상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
- 비타협적 정치문화는 강력한 정치제도(권력 분권) 통해서만 개선 가능
- 이원집정부제는 내각제의 국회해산 남발 우려 불식

나라 안팎에서 국가의 명운을 가를 굵직한 이슈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여가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통령선거까지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일반시민뿐 아니라 전문가집단조차 진영논리에 갇혀 국론마저 사분오열하고 있다. 이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새 정부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2017 이슈 배틀’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진영논리로 첨예하게 대립한 이슈를 골라 치열한 토론 배틀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드러내 가되 합의도 모색하는 새로운 실험이다. 이를 위해 소속 대학과 전공·연령대가 다양한 10명의 교수로 판정단을 구성했다. 주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한 명의 교수가 사회를 맡고, 나머지 9명이 판정단으로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은 3라운드로 이뤄진다. 1라운드는 평소

판정단의 생각을 드러낸다. 2라운드에선 첨예하게 대립된 이슈를 대변할 각 진영의 전문가 설명을 듣고 판정단이 다시 입장을 정리한다. 3라운드에선 판정단이 스스로 참여해 토론해 보고 최종 입장을 정한다. 라운드마다 입장을 바꾼 판정단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밝힌다. 배틀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첨예한 이슈를 둘러싼 서로 다른 논리와 이면의 이해타산을 파악할 수 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다르고 타협점은 어디인가’를 찾아가게 된다.

‘2017 이슈 배틀’은 앞으로 매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를 다룬다. 중앙일보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안민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SSK 네트워크지원사업단이 주관한다.

장원석 기자

“중국도 대북제재 동참 압박” 설득에 대화파 1명, 제재로

리셋 코리아

2017년 4월 27일 목요일 중앙일보

2017 이슈 배틀

2 새 정부 대북정책 제재나 대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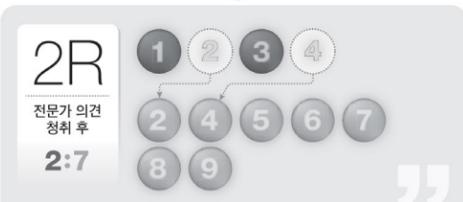
한국인은 흔히 ‘다름’과 ‘틀림’을 혼용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논리가 관치는 까닭이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선 국가 개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중앙일보는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코리아’의 하나로 ‘2017 이슈 배틀’ 시리즈를 시작한다. 가장 첨예한 이슈를 골라 ‘틀림’이 아닌 ‘다름’의 토론 현장을 배틀 형식으로 생중계한다. 두 번째 주제는 ‘새 정부 대북정책’이다.

이슈 배틀
10인의 판정단
※ 사회자는 투표 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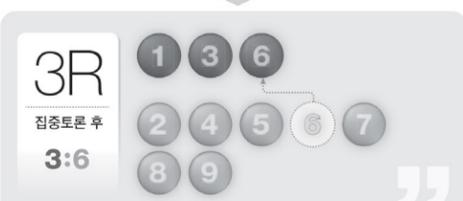
박인휘(사회자) 이화여대 외교학 김세건 강원대 인문학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박찬수 고려대 경영학 안영진 전남대 지리학 정창국 울산과학기술원 기초과정부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 한준 연세대 사회학

새 정부 대북정책, 판정단 9인의 생각 변화는 ※사진 순서와 번호는 관련 없음



판정단② 생각을 바꾼 결정적 한마디
“보수정권 10년의 제재로 ‘심화된 단절’ 빼고 대체 우리가 뭘 얻었나? 개성공단까지 닫았는데 북한이 항복했나? 제재 만능주의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협상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수단이지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판정단④ 생각을 바꾼 결정적 한마디
“몸살 감기에 걸렸을 때 다양한 처방이 필요하듯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사적 억지, 외교와 협상, 제재와 압박, 북한 민주화와 정권교체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상황 악화를 막는 전략적 관리 차원에서도 대화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판정단⑥ 생각을 바꾼 결정적 한마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의 카운터파트너로 중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중국도 마냥 거칠어진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이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금은 더 밀어붙일 때다.”

한반도 ‘4월 위기설’에도 9명 중 5명 “대화 재개하자”

1 Round ◆ 사전투표 = 4월의 한반도엔 전운이 감돈다. 미국과 중국의 동반 압박에도 북한은 핵실험 카드를 놓지 않고 있다. 리더십 실종 상태인 한국은 주도권을 잃은채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이 한국을 빼놓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화두로 떠오른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할까? 북한의 태도에 더 강경한 제재로 맞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 사회 지성 10인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정은은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연일 경고장을 날리던 4월 14일, ‘2017 이슈 배틀’ 두 번째 토론이 열렸다. 북한이 핵 실험 강행을 재차 공언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었음에도 판정단의 사전투표 결과는 의외였다. 이날 주제인 ‘새 정부, 대북정책 어떻게 해야 하나?’ 를 놓고 판정단은 사전투표에서 4명이 제재 국면 유지, 5명은 대화 재개를 택했다. 판정단에서도 ‘의외의 결과’라는 평이 나왔다.

“개성공단 폐쇄로 북 항복했나” 두 명이 더 대화로 돌아서

2 Round ◆ 전문가 의견 청취 = 제재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햇볕정책 무용론’ 으로 포문을 열었다. 김영호 교수는 “진보정권 10년 동안 북한에 거액의 현금을 지원하면서 북한 스스로 개혁을 해야겠다는 인센티브마저 없애 버렸”고 지적했다.

“대화는 대북한 역사가 제대로 이뤄진 상태에서나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와 대화를 하는 건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고 인식시키려는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핵 개발이다.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에 입장을 같이하는 지금 상황에서 대화 재개는 시기상조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현재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정책대변인을 맡고 있음)가 반박에 나섰다. 김근식 교수는 “보수정권 10년의 제재로 ‘심화된 단절’ 빼고 대체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나? 고 반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놓은 햇볕정책 첫번째 원칙은 튼튼한 안보와 무력도발 불응이었다. 무조건 퍼주자는 게 아니다. 햇볕정책은 관여(Engagement)의 의미로, 단순한 유화(Appeasement)정책과 다르다. 끊임없이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게 목표다. 제재만능주의는 한계가 명확하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줘야지 대화를 끊어서 안 된다. 현 정부에서 개성공단까지 닫았는데 북한이 항복했나? 제재는 협상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김영호 교수가 재차 반론에 나섰다. 강력한 제재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냉전 초기 대소련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에선 ‘알타전통’ 과 ‘리가전통’이 대립했다. 알타전통은 히틀러에게 대항하기 위해 만든 미국과 소련의 연합전선이 전쟁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었고, 리가전통은 소련의 전체주의적 특성상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논쟁 끝에 트루먼 대통령은 후자를 택했고, 이후 1989년 냉전이 끝날 때까지 미국은 9개의 행정부가 일관되게 정책 방향을 유지했다. 장기간의 봉쇄를 통해 미국은 냉전의 평화적 종식을 이끌어 냈다.

이에 대해 김근식 교수는 “몸살 감기에 걸렸을 때 다양한 처방이 필요하듯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사적 억지, 외교와 협상, 제재와 압박, 북한 민주화와 정권교체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이긴 싸움 속에 상황을 유지하고, 악화를 막는 전략적 관리 차원에서도 대화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 이라고 응수했다.

두 명의 전문가가 자리를 떴다. 두 번째 투표에선 두 명의 판정단이 생각을 바꿨다. 제재 국면 유지를 지지했던 판정단②와 ④가 대화 재개로 돌아섰다. 두 사람은 “사실상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한 마당에 그간의 제재가 어떤 효과를 거뒀느냐는 지적에 공감했다” 고 말했다.

“미국, 압박상황... 새 대통령도 강공전략을”
“남북대화 창구가 없으니 코리아 패싱된 것”

3 Round ◆ 집중토론 = 토론의 출발점은 양측의 주장이 아닌 ‘자조론’ 이었다. “코리아 패싱에 온 국민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제재든 대화든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한국이 빠졌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북한이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는 지조차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진짜 반성해야 할 건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펼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혼란기에 초유의 리더십 부재 상태를 만들어 놓은점이다.”

판정단⑦의 말에 대다수 판정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대화가 필요하다. 제재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의존적이어야 한다. 관계가 얽히고, 오랫동안 지속돼서 의존도가 강해지면 그걸 끊을 때 아픈 거다. MB정부 이후 남북 관계는 사실상 끊겼다. 그러니 제재를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거다.”<판정단⑤>

“위험의 상시화 탓이겠지만 한국은 핵에 대해 너무 둔감하다. 하나라도 서울 상공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보라. 강 건너 불 아니고 발등의 불이다. 이 판국에 대화를 하자는 건 너무 한가한 소리 아닌가? 국제 공조를 통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재해 나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판정단①>

“북한이 가진 저 위험한 장난감을 없애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빼앗아 오는 방법이다. 전쟁을 불사해야 하니 사실상 불가능하다. 둘째, 스스로 내놓게 하는 거다. 죽을 정도로 아파야 내놓을 텐데 중국이 버티는 한 국제 제재는 한계가 있다. 핵 개발이 사실상 끝났다는 게 그 근거 아닌가? 셋째, 거러를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젠 돈 주고 사기에도 늦었다. 김근식 교수의 말대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최소한 대화의 물꼬는 터야 하는 것 아닌가?”<판정단⑥>

대화 유지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판정단③이 역공에 나섰다. “최근 20년간 대화와 제재를 반복해왔다. 장기적이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략을 바꾸니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햇볕정책 10년밖에 못했다고 하는데 제재 카드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우방인 미국이 유례없이 강력한 압박을 천명한 상황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은 강공 전략을 써야 북한이 꼬리를 내린다.

“대화한다고 지금 하는 제재를 중단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나? 제재만능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는데 금강산 관광도 버리고, 개성공단도 닫았다. 이젠 쓸 카드도 없다. 판정단⑦의 얘기처럼 우리가 왜 지금 ‘왕따’가 됐는지 생각해보라. 대화의 창구마저 없으니 ‘힘 없는 나라’ 취급하는 게 아닌가? 강대국은 강대 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생존 전략이라는게 있어야 할 것 아닌가?”<판정단⑨>

대화 재개 쪽으로 기우는 상황에서 사회자가 ‘차기 대통령은 출

범 초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개성공단 재개, 5·24조치 해제를 제안해야 하는가' 라는 즉석 질문을 던졌다. 9명 중 6명이 반대했다. 대부분 시기상조라는 의견이었다. 판정단④는 “서둘러 내놓은 대선 공약을 매만지고, 구체적인 설계도부터 그려야 한”고 말했다.

2시간에 걸친 토론이 끝나고 최종 투표가 시작됐다. 대화 재개를 택했던 판정단⑥은 입장을 바꿔 제재 국면 유지로 돌아섰다. 나머지는 이전 선택과 같았다. 판정단⑥의 생각을 바꾼 건 판정단①의 이 한마디였다.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카운터 파트너로 중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중국도 마냥 거절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이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 북한은 이전과는 크게 다른 고통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미국과 함께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학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사회과학분야의 15개 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융합적 시각에서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하고, 시대적 현안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우규)은 1997년 공동체 자유주의를 기치로 만든 학자들의 모임이다. 매주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안민정책연구원을 통해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SK네트워킹지원사업단(단장 김종길)은 한국연구재단이 세계수준의 연구 집단 육성을 목표로 실시하는 SSK(한국사회과학연구)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연구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장원석 기자

교수 9인, 3단계 토론 ... 타협점 찾는 실험

‘이슈 배틀’ 어떻게 진행하나

‘2017 이슈 배틀’은 치열한 토론 배틀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드러내 가둬 합의도 모색하는 새로운 실험이다. 이를 위해 소속 대학과 전공·연령대가 다양한 10명의 교수로 판정단을 구성했다. 주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한명의 교수가 사회를 맡고, 나머지 9명이 판정단으로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은 3라운드로 이뤄진다. 1라운드는 평소 판정단의 생각을 드러낸다. 2라운드에선 참여하게 대립된 이슈를 대변할 각 진영의 전문가 설명을 듣고 판정단이 다시 입장을 정리한다. 3라운드에선 판정단이 스스로 참여해 토론해 보고 최종 입장을 정한다. 라운드마다 입장을 바꾼 판정단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밝힌다. 배틀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참여한 이슈를 둘러싼 서로 다른 논리와 이해타산을 파악할 수 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다르고 타협점은 어디인가’를 찾아가게 된다.

‘2017 이슈 배틀’은 중앙일보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안민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SSK 네트워킹지원사업단이 주관한다. 1976년 설립된 한국사회과학협의회(회장 이진규)는 한국 사회과

학회동정

1. 경제사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 일시 : 2017년 5월 13일 (토) 13:00 - 17:10
- 장소 :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국제관

2. 국제개발협력학회

2017년 하계학술대회

- 일시 : 2017년 6월 9일(금)
-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주제 : 국제개발협력과 지역학의 만남

3. 대한지리학회

2017년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 일시 : 2017년 6월 23일(금) ~ 2017년 6월 24일(토)
- 장소 : 전남대학교

4. 한국경영학회

춘계심포지움

- 일시 : 2017년 5월 25일 목요일 오후
- 장소 : 대한상의 회의실
- 주제 : 환경경영 및 경쟁력 제고전략

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 일시 : 2017년 8월 21일(월) ~ 23일(수)
- 장소 :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 주제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업경쟁력 제고전략

5. 한국교육학회

2017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일시 : 2017년 6월 23일(금) ~ 24일(토)
- 장소 : 충남대학교
- 주제 :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교육

6. 한국국제정치학회

2017년 하계학술대회

- 일시 : 6월 29일(목) ~ 7월 1일(토)
- 장소 : 전북대학교
- 주제 : 불확실성 시대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외정책

7. 한국문화인류학회

2017년 제 57차 정기학술대회

- 일시 : 5월 19(금) ~ 20(토)
- 장소 :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안산)
- 주제 : 마주침의 문화정치: 이주, 광장, 공공성

2017년 제 58차 정기학술대회

- 일시 : 2017년 10월 20일(금) ~ 21일(토)
- 장소 : 제주
- 주제 : 인간의 조건을 다시 묻다: 기술, 환경, 문화

8.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및 기념행사

- 일시 : 2017년 6월 14일 (수)
학술심포지엄 : 오후 2시- 6시,
축하기념행사: 6시 - 8시 30분
- 장소 : 연세대학교

협의회 행사

I. 협의회 회의

1. 2017년 제 1차 운영협의위원회

- 일시 : 2017년 2월 27일(월) 8:00~10:00
- 장소 : 플라자호텔 일식당 무라사키

2. 2017년 이사 간담회

- 일시 : 2017년 5월 25일(목) 12:00~2:00
- 장소 : 플라자호텔 일식당 무라사키

II. 정책토론회

	주제	비고
2월 10일(금)	비정규직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추후 게재 예정
3월 10일(금)	정부형태 어떻게 바뀌어야하나?	3월 16일(목) 중앙일보 게재
4월 14일(금)	새 정부 대북정책 제재냐 대화냐?	4월 27일(목) 중앙일보 게재
5월 12일(금)	법인세 부담 인상 인하?	곧 게재 예정

III. 심포지움

1. 한국심리학회 공동 심포지움

- 주제 : 한국사회의 내일을 묻는다: 신뢰와 행복의 관계
- 일시 : 2017년 2월 9일(목) 13:10~17:00
- 장소 : 연세대학교 백양누리관 그랜드볼룸
- 주최 : 한국심리학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공동주최
- 후원 : (재)미래인력연구원, 박영사, 학지사

IV. 2016년 12월 KSSJ 43-2호 발간



9. 한국심리학회

2017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일시 : 2017년 8월 17일 ~ 19일
- 장소 :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 주제 : 한국사회 통합의 메카니즘: 보수의 마음과 진보의 마음 이해하기

10.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회 2017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 일시 : 2017년 5월 19일(금) ~ 20일(토)
- 장소 : 제주국제대학교
- 주제 : 성찰과 용기 - 언론과 언론학의 진정성 복원을 위한 첫걸음

11. 한국여성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 일시 : 2017년 6월 17일(토)
- 장소 : 명지대학교
- 주제 : 사회변화의 민주적 역동과 젠더관계(가제)

2017년 여성주의 여름캠프

- 일시 : 2017년 8월 중 1박2일
- 장소 : 전주한옥생활체험관
- 주제 : 2017 페미니즘 허브('herv: herstory+vision')

2017년 제2차 학술포럼

- 일시 : 2017년 10월 13일(금) 오후 2시
- 장소 :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 주제 : 젠더와 남성성의 미래(가제)

12.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학 세계학술대회(The World Congress for Korean Politics and Society 2017)

- 일시 : 6월 22일~24일(목~토)
- 장소 :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 주제 : 평화와 민주주의에서의 신뢰 회복(Rebuilding Trust in Peace and Democracy)

2017년 전국 대학생 정치평론대회

- 접수 및 예선 : 5월 1일(월)~6월 30일(금)
- 예선 심사 : 7월 1일(토)~31일(월)
- 본선 진출자 발표 : 8월 15일(화)
- 본선 및 시상 : 8월 25일(금) 국회

13.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 일시 : 6월 22일(목)~24일(토)
- 장소 : 전북대학교
- 주제 :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협의회 임원진

회장단

	성명	소속	비고
회장	이진규	고려대 경영학	(전) 한국인사조직학회(14대)
부회장	강선보	고려대 교육학	(현)한국교육학회
	김재휘	중앙대 심리학	(현)한국심리학회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 영상 광고 홍보학부	(현)한국언론학회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	차기 회장 / (전) 한국정치학회(2011년)
	한인구	KAIST 경영공학	(현)한국경영학회
감사	김지수	영남대 경영학	
	손승영	동덕여대 여성학	

이사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백완기	고려대 행정학	정용덕	서울대 행정학
안병영	연세대 행정학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
원우현	고려대 언론학	차재호	서울대 심리학
이종원	성균관대 경제학	한상복	서울대 인류학
임희섭	고려대 사회학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

집행위원회

분과	성명	소속	비고
연구	한준	연세대 사회학	위원장
	김옥태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	
	김주현	충남대 사회학	
	배영	송실대 정보사회학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육학	
편집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위원장
	김치욱	울산대 국제관계학	
	손원숙	경북대 교육학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부	
	정재용	카이스트 경영학부	
	각 학회 편집위원장		
대외협력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위원장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	
	정완교	한림대 경영학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	
	허경선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사무국	박찬수	고려대 경영학	국장
	전성희		간사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운영협의위원회

학회	성명	소속
경제사학회	김호범	부산대 경제학부
국제개발협력학회	이희진	연세대 국제대학대학원
대한지리학회	이승호	건국대 지리학
한국경영학회	한인구	KAIST 경영공학
한국경제학회	구정모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한국교육학회	강선보	고려대 교육학
한국국제정치학회	김유은	한양대 국제대학대학원
한국문화인류학회	정병호	한양대 문화인류학
한국사회복지학회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
한국사회학회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
한국심리학회	김재휘	중앙대 심리학
한국언론학회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한국여성학회	김혜경	전북대 사회학
한국정치학회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
한국행정학회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

KOSSREC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발행인 _ 이진규
발행처 _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발행일 _ 2017년 5월



KOSSREC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길 25(사직동) 03028

25 Inwangsan-ro 1Gil (Sajik-dong), Jongro-ku, Seoul, Korea, 03028

Tel. 02-735-2159 Fax. 02-737-3264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

이 뉴스레터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3A3923036)